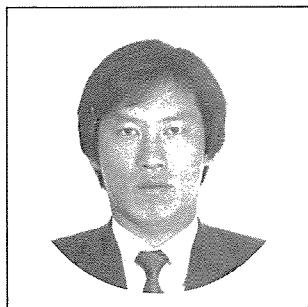


經濟·技術개발정책 우선의 中國·泰國·印尼를 보고



## 경계해야 할

“新興공업국의 追越意志”

尹 德 老

〈毎日經濟新聞 과학기술부 記者〉

마카오에서 중국 廣東省으로 들어가는 중국 측 세관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가르는 타임머신이었다.

세관을 빠져나오면서 한 순간에 서울 명동에서 시골의 어느 작은 읍내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에서 버스로 약 10분 정도 달려 광동성 주해시 經濟特區의 건설현장에 도착하면 또 다른 풍경을 접하게 된다. 출지어 들어선 현대식 아파트군, 파헤쳐 놓은 공장부지에서 우리의 반월공단 또는 창원공단의 초기 건설현장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경제개방정책에 따른 활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廣州로 향하는 동안에 또다시 우리의 30년전에 해당하는 과거와 접하게 된다.

국제적 수준의 호텔, 건설현장과 달리다가 해체될 것 같은 버스, 열음통에서 만든 아이스케이크로 대변되는 극단적으로 현대와 과거가 어울려 뒤섞인 곳이 바로 중국의 모습이었다.

이같은 과거의 모습을 일거에 현대로 끌어 올리려는 중국의 노력은 그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자본, 기술, 기업의 진출을 요망

하고 있다.

주해 경제특구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성중인 공업단지중의 하나다.

총 120km<sup>2</sup>로 조성되는 이 공업단지는 4개 공업지구로 구분, 경공업, 중공업, 방직업, 전자업종을 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7만톤급의 항구접안시설을 앞으로 40만 톤까지 늘리고, 비행장을 건설하여 廣州市까지 금년내에 고속도로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주해시정부 관리의 말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중국의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해시정부와 주해인민대외우호협회는 한국의 벤처캐피탈회사인 한국기술개발(주)에 주해 경제특구내에 한국공업단지의 조성을 제안해 왔다.

마카오와 인접한 지역에 약 32만 평방미터의 공업단지를 조성,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입주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공업단지는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해 경제특구에 있는 중국기술개발공사를 찾았을 때에도 한국기업의 진출과 기술이전을

요청해 왔다.

중국의 다른 기업들과 달리 연구개발, 생산, 무역과 기술수입을 모두 맡고 있는 중국기술개발공사의 천시에 총경라는 『한국기업이 합작이던 단독 투자건 중국에 진출할 때 공장의 입지 선정을 비롯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중국진출을 요청했다.

중국 최고 기업 중 하나라는 이 회사는 VTR을 이용, 회사소개를 했다. 그러면서 중국내에서 VTR로 회사를 소개하는 기업은 중국기술개발공사 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의 시작에서 볼 때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됐다는 인상은 광주춘계무역박람회에서도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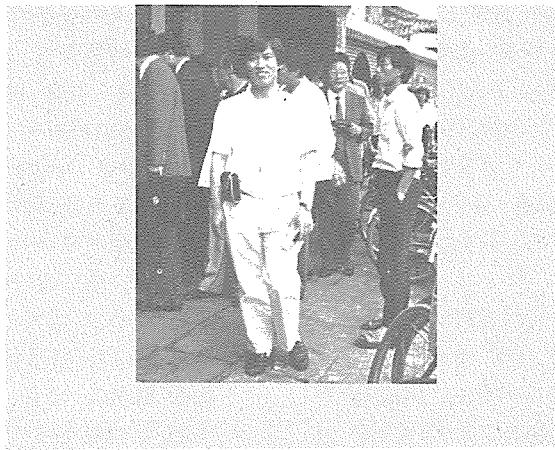
중국내 3만여 기업이 참여한다는 이 박람회의 주종은 의약품, 식품, 섬유제품 등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대체적으로 조잡한 느낌을 줬다. 이밖에 농기계, 방직기계와 전자제품도 선을 보였다.

이 박람회에서 만난 충잉치 대회선전담당 부주임도 『중국은 과학기술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전자, 컴퓨터의 기술도 많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형가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유고와 무역사무소를 개설했다는 사실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그는 한국의 공장과 관리기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대표들로 구성된 한국기술개발 투자조사단의 일원인 한 섬유기업체 사장은 기계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중국의 기술이 표면에 나타난 것처럼 낙후돼 있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선반, 기계류 등 있을 것은 다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불과 몇년전에 개발한 제품도 있



다』고 말한다. 다만 시제품적인 성격이 강하고 품질이 다소 뛰어지기는 하지만 그같은 문제는 쉽게 개선될 수도 있다 는 지적이었다.

아직 중국이 우리의 경쟁상대는 아닌 것 같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일단은 경제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제도적인 문제나 생산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진출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한국기업진출붐이 일고 있다. 돈무양국제공항에서 방콕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변에 日本 히다 치등과 함께 서 있는 三星電子, 金星社의 입간판, 빌리섬 촌구석의 상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味元의 선전간판에서 한국기업 진출리시를 엿볼 수 있다.

泰國,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기업투자유치정책과 함께 노사분규, 임금인상, 원화절상 등 국내외적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기업의 동남아 현지진출이 늘고 있다.

올들어 크게 늘어난 태국,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은 105개사에 달한다.

泰國의 경우 방콕한국무역관에 따르면 금년 3월 말 현재 40개의 생산업체가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기업의 진출은 지난해 아래 크게 늘어 86년 이전에는 5개 기업에 불과했으나 87년 5개기업, 88년에는 25개 기업이 진출했고, 금년에도 3월까지 5개 기업이 태국 투자진흥청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다.

이중 삼성전자が 「시라차」공단에 공장을 건설중인 것을 비롯, 한국마벨, 동아스포츠 등 11개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또 맥슨전자 등 17개 업체가 공장가동에 들어갔으며 한양화학 등 12개 업체가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해까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합작진출업체는 61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올들어서는 진출업체가 더욱 늘어 투자신청업체가 50건이며 이중 8건이 BKPM(투자조성위원회)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합작기업들은 산림개발, 핵판, 조미료등 현지의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과 함께 에너지, 화학제품, 섬유, 신발, 완구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泰國과 인도네시아가 한국기업의 진출기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 낮은 임금, 자유무역제도, 비교적 양호한 사회간접시설등을 공통적으로 끌을 수 있다.

泰國의 경우 태국정부가 해외기업의 자국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세제상 혜택, 투자기업보호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임금 면에서도 한국의 3분의 2정도로 싸고 노동의 질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泰國은 최근 일본, 대만, 유럽등으로부터 투자특혜신청이 쇄도해서 선별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으며, 공업의 지방분산화를 목적으로 방콕중심 수도권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종래에는 투자진흥청이 외국합작기업의 적극적인 프로젝트추진에 수동적으로 응했으나 최근 능동적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득실을 검토하는 등 투자특혜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합작기업에 대한 특혜가 태국보다는 적지만 한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더욱 유리하다는게 자카르타무역관의 분석이다.

우선 태국진출이 시기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반면 인도네시아는 투자유치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투자가능분야만 고시한 포지티브시스템을 투자금지품목만 고시하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손실을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으며 수입관세 면제 및 환급 과실송금을 비롯한 해외송금자유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 이미 진출한 국내기업 관계자들은 태국, 인도네시아가 투자지역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지에 진출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특히 현지의 낮은 임금수준과 국내의 어려워져가는 기업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동남아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泰國에 진출한 삼미사운드테크 박형우사장은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낮지만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생산성을 보충하기 위해 고용을 늘려야 하고 그만큼 인건비절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단순노동자외에 사무직, 기술직등 중간관리층을 구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역시 태국에 진출한 건설업체인 AKT의 안계욱 사장도 『인건비는 싸지만 건설자재가 비싸고 부동산 값이 뛰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있는 제일삼성아스트라의 한 관계자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시행령이 수시로 바뀌는 등 현지의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기업이 진출하기에 동남아는 최적의 투자기능지역이지만 진출기업들이 채산성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고 면 앞날을 내다보는 투자가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국과 숙명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은 최근 첨단산업의 육성에



심혈을 쏟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가족중심의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한 대만이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의 육성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타이페이에서 70km 떨어진 신추市에 대만정부가 조성중인 「사이언스 파크」가 대만의 의지가 집약된 첨단산업의 요람이다. 대만 국가과학위원회 주도로 조성되기 시작한 사이언스 파크는 美國의 실리콘 밸리를 모델로 대만의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80년부터 추진해 왔다. 1999년까지 완전 조성될 사이언스 파크는 산학협동을 통해 첨단산업을 중심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연구인력 5천명, 한 해 연구개발비로 대만돈 25억원(6백25억원상당)을 사용하는 공업기술연구원과 칭화대학, 채오토대학이 이 단지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이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체로는 집적회로, 컴퓨터, 전자통신, 광학, 자동화장비, 생명공학, 환경 및 에너지관련등 첨단산업체로 제한돼 있다.

총 300ha 규모의 개발부지에 10만평방미터의 표준공장부지, 3개의 연구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파크에 입주한 기업은 작년 말까지 98개 기업이다. 이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79개, 가동중인 기업이 98개, 입주승인이 난 기업이 105개업체다.

특히 가동중인 기업중에는 집적회로, 컴퓨터, 전자통신, 자동화장비생산업체가 8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언스 파크의 1인당 생산량은 83년 3만달러에서 87년 6만7천달러, 88년에는 11만달러로 급속히 늘고 있다.

전체생산량은 86년 4 억5천만 달러에서 96년 까지 60억달러로 고용인력을 86년 8,300명에서 5만여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만 경제에서 신추 사이언스 파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 제조업중 86년도에 1.6%였으나 공단이 완성될 무렵인 96년경에는 10%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개발비도 86년 8.6%에서 96년에는 25%를 사이언스 파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 단지를 통한 첨단산업육성의지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언스 파크가 대만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구간적인 산학협동분위기에 있는 것 같다. 공업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소가 서로 연계, 기술개발 및 연구방향에 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칭화대학, 채오토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특히 집적회로의 설계와 제조, 전자공학, 첨단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조인트 벤처, 자문등도 산학협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이언스 파크를 통한 대만정부의 첨단산업육성의지는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대만의 공업단지 입주기업이 공통적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장려금 300만 대만달러외에도 사이언스 파크 입주기업은 최종제품수출시 5년간 수출세 면제, 기계설비 수입세 면제와 함께 은행대출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만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 같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대만이 한국을 따라잡자라는 모토아래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름간의 짧은 기간동안 들려 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 성장을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같은 신흥공업국으로 경쟁상대에 있는 대만도 첨단산업육성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 우리 경제, 우리 기술이 자만심을 갖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